

# 최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동향<sup>1)</sup>

*Recent Trends in Japan's Population Policy*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며

일본은 1990년의 「1.57 쇼크」 이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저출산 정책이 수립되어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다. 저출산 정책이 시작된 이래 20여년이 되었지만, 2012년의 합계출산율은 1.41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정책에 비하여 그 효과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2014년 6월 24일에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4」(일명 골태방침<sup>2)</sup>)이라 하며 이하 기본방침이라 함)가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이 방침에는 일본 정부 문서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의 적정인구 유지에 대한 언급

이 있었다. 즉, “앞으로 50년 후 인구 1억명 정도의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앞으로 일본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실시해 나가려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3년 3월 모리 마사코 저출산대책담당 특명장관 산하에 설치된 「소자화 위기돌파 태스크 포스」(이후, 「태스크 포스」)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로 그 이전까지 실시해 왔던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학계에도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sup>3)</sup>. 이렇듯

1) 본고는 「平成25年度少子化の状況及び少子化への対処施策の概況」(평성 25년도 소자녀화의 상황 및 소자녀화 대처시책의 개황, 일명 '소자화백서 2014' 와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14」(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4)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2) 골태방침(骨太の方針)이란 단어의 의미로 보면 골격이 튼튼한 방침이란 뜻으로 정책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코이즈미 정권 시절부터 시작되었음(2001년). 참고로 이 방침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의결됨. 그리고 이후부터는 '기본방침'이라 간략화 함.

3) 2014년 6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도쿄의 메이지 대학에서 열린 일본인구학회 제 66회 학술대회는 학술대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포지엄의 주제가 '소자화 대책의 패러다임 변환: 새로운 가족정책에' 라는 제목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모리 마사코 장

최근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기본방침을 포함한 최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이 아닌, 그 이전에 시행된 정책의 보완 및 개정, 그리고 새로운 정책수요 등장 등의 여러 과정을 통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일본의 저출산 정책을 간단하게 살펴본 뒤에 최근의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 2. 과거 저출산 정책의 흐름

### 1) 엔젤 플랜과 신엔젤 플랜

우리나라는 2006년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이하, 새로마지 플랜)으로부터 저출산 정책을 실시해 온 반면, 일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10여 년 빠른 1995년부터 저출산 정책을 실시해왔다.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저출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은 1990년의 「1.57 쇼크」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1.57 쇼크」는 1966년의 합계출산율이었던 1.58보다 작아지게 된 충격의 표현이었다. 합계출산율이 1.58이었던 1966년은 60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백말 띠였

는데, 이때에 낳은 딸은 성격이 사납고 남편을 빨리 죽게 한다는 미신이 유행하여 사람들이 출산을 억제시킨 결과 1.58이라는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런데 1989년은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57이 되었고, 이러한 수치를 일본 정부가 문제시하게 되면서부터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94년 12월, 「금후의 육아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방향에 대하여」(엔젤 플랜)라는 정책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주로 보육의 양적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0~2세 보육, 연장보육 등의 다양한 보육의 실현, 지역육아센터 정비 등을 위한 「긴급보육대책 5개년사업」을 책정하여 1999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추진되었다.

그 후 1999년 12월에는 「소자화 대책추진 기본방침」(소자화 대책추진 관계각료회의 결정)과 이 방침에 기초를 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소자화 대책의 구체적 실시계획에 대하여」가 책정되었다. 이 정책을 신엔젤플랜이라 하고, 엔젤플랜을 보완·개정하여 2000년도부터 5년간 추진되었는데, 이 정책에는 보육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고용, 모자보건, 교육 등도 포함되어 엔젤플랜보다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 2) 차세대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과 자녀·육아 응원 플랜

그동안 육아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

관도 참석하여 앞으로의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음.

문에 가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앞으로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합심하여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관점에서 2003년 7월, 지방공공단체 및 기업이 앞으로 10년간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방안을 담은 「차세대육성 지원대책 추진법」이 제정되었다. 즉,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주는 정부가 책정하는 행동계획 책정지침을 참고하여, 그 목표를 제시하고, 내용 및 실시할 시기를 정한 행동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는 것을 담고 있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소자화 사회 대책 개요의 구체적 실시계획에 대하여」가 제정되었는데, 이를 자녀·육아 응원 플랜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소자화 사회 대책 개요」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4년 6월에 제정된 것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을 모토로 저출산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들을 담고 있다.

### 3) 새로운 저출산 정책 및 중점 전략과 어린이·육아 비전

2005년은 일본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수 있는데, 인구동태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899년 이래 사망수가 출생수를 넘어선 최초의 해였으며,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1.26을 기록한 해였다. 이런 급격한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새로운 소자화 대책에 대하여」)을 제정하였다. 이

정책은 이전보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였고, 이러한 것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여성의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야 하는 것과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발생하는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걸었다.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일본의 장래 인구구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추계치가 발표된 후, 2007년 12월 소자화 사회 대책 회의는 「아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취업과 출산·육아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실현」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기반이 되는 「포괄적 차세대 육성 지원틀 구상」(「부모의 일과 육아의 양립」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육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신대기아동 제로작전」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대기아동해소 등을 담은 보육정책을 질적 및 양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2009년 10월 내각부의 소자화 대책 담당의 정무 3인(장관, 차관, 장관 정무관)으로 구성되는 「어린이·육아 비전 검토 워킹 팀」을 발족시켜 수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담당자 및 국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2010년 1월 「소자화 사회 대책 기본법에 기초한 새로운 개요」를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 정책은 크게 ①생명과 양육을 중요시하

고, ②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힘든 이들을 돕고, ③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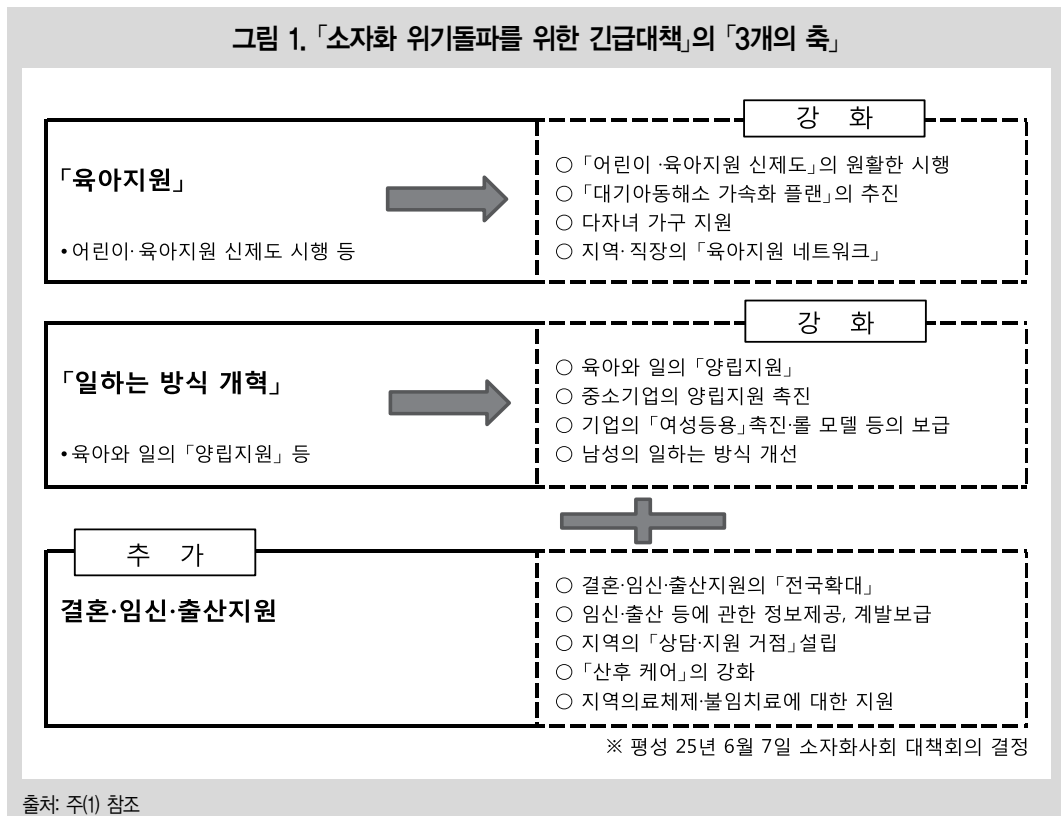
### 3. 최근 저출산 정책의 흐름<sup>4)</sup>

#### 1) 소자화 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

2013년 3월부터 내각부 특명담당 장관(소자화대책) 소관하에 앞서 언급하였던 태스크 포스

를 발족시켰다. 태스크 포스는 가족형성(family formation)과정에서 계획했던 자녀를 가지지 못하게 된 요인을 해소할 대책과 가정과 지역의 유기적인 육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논의가 행해졌고, 2013년 5월 28일에 『소자화 위기돌파』를 위한 제안』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되었다. 이 제안을 기초로 하여 같은 해 6월 7일에는 내각 총리를 회장으로 하고 전 각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소자화사회 대책회의에서 「소자화 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이하, 「긴급대

그림 1. 「소자화 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의 「3개의 축」



4) 「어린이·육아 비전」과 본 절의 「소자화 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 사이에는 「어린이·육아 관련 3법안」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것과 정권 교체와 관련되어 저출산 정책 기조의 변화과정에 대한 것은 '조성호(2014), 일본의 유치원(幼稚園)과 보육소(保育所) 통합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8호(2014.2), pp.87~97' 을 참조.

책)이 결정되었다.

긴급대책은 지금까지 소자화대책으로 추진되어 온 「육아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혁」을 더욱 강화시킴과 동시에 「결혼·임신·출산지원」을 새로운 대책의 한 축으로 상정하여, 이 「3개의 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림1).

또한 긴급대책의 내용은 뒤에 자세하게 언급할 기본방침 및 「일본부흥전략-JAPAN is BACK-」(평성 25년<sup>5)</sup> 6월 14일 각료결정)에도 포함되어 정부주도의 새로운 소자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 하고 있다.

## 2) 소자화 위기돌파 태스크 포스(제2기)

긴급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내각부 특명담당 장관(소자화대책) 소관하에 「소자화 위기돌파 태스크 포스(제2기)」(이하, 「태스크 포스(제2기)」)를 발족시켰다. 태스크 포스(제2기)는 긴급대책에서 내걸었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 등을 검토하는 「정책추진팀」과,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보급계발의 내용 및 제공 방법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정보제공팀」을 설치하였다.

그 후 2013년 11월 26일에는 정책추진팀에서 「소자화 위기돌파를 위한 긴급제언」(이하, 「긴급제언」)을 총괄하여 정리하였다. 긴급제언

은 소자화 위기돌파기금의 창설 및 차세대 육성 지원 추진법의 연장 및 강화, 장시간 노동 억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앞으로 대처해야 하는 7개의 과제와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에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검토해야 하는 3개의 제언을 발표하였다. 이 제언은 태스크 포스(제2기)에서 주로 논의된 주제를 총괄 정리한 결과로 상세한 내용은 이하와 같다.

### ○ 앞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와 정책 방향

- ① 도시와 지방이 서로의 특성을 살린 소자화 대책을 세워야 함
- ② 소자화 대책을 위한 자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 ③ 결혼·임신·출산·육아의 「끊임없는 지원」을 위한 「지역 소자화 대책 강화 교부금」의 연장 및 확충 필요
- ④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 ⑤ 소자화 위기돌파 인식공유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⑥ 정책의 정리 및 검증(「CAPD」사이클<sup>6)</sup> 실시
- ⑦ 소자화 대책 목표 검토

### ○ 앞으로 검토해야 하는 제언

- 제언 1. 새로운 정책틀 검토
- 제언 2. 소자화 대책 집중실시기간 설정 및 정책 실시, 자원 확보

5) 일본은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연호를 쓰는데, 현재는 1989년 1월 7일에 즉위한 아키히토 일왕의 시대로 연호는 평성(平成; 헤이세이)이고, 1989년이 평성 1년 및 같은 해 1월 7일은 쇼와(昭和; 쇼와) 64년이라 함, 참고로, 2013년은 평성 25년.

6) CAPD란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Check, Act, Plan, Do의 약자. 즉, 업무의 실사가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Check,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부분을 찾아 처리하는 Act, 종래의 실적 및 예측 등을 기초로 하여 업무계획을 작성하는 Plan, 계획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Do의 순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제언 3. 남아있는 과제에 대한 심층적 논의

### 3) 지역 소자화 대책 교부금의 창설

긴급대책 및 긴급제언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의 끊임없는 지원의 중요성이 포함된 것 이외에 「호순환(好循環)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평성 25년 12월 5일 각료 결정)에서도 「지역 소자화 대책 강화」가 포함되었다. 이와 더불어 2013년 추경예산 중 「지역 소자화대책 강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 창설되었다(30.1억엔). 이 교부금은 결혼·임신·출산·육아의 끊임없는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독자적이고 선구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①결혼·임신·출산·육아의 끊임없는 지원을 하기 위한 계획 구축, ②결혼 정보 제공 등, ③임신·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④결혼·임신·출산·육아를 하기 쉬운 지역을 만들기 위한 환경 정비를 해야 한다.

### 4) 대기아동의 해소

2013년 4월에는 보육소의 정원이 228만 8,819명(전년대비 4만 8,641명 증가), 취학전 아동의 보육소 이용비율(보육소 이용 아동수/취학전 아동수)이 35%(전년대비 0.8포인트 증가)였다. 그리고 보육소 대기아동수는 3년 연속으로

감소한 2만 2,741명(전년대비 2,084명 감소)이었다. 또한 대기아동이 50명 이상 존재하고 있고 보육의 공급체제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특정 시구정촌은 101개 였다(전년대비 6개 감소<sup>7)</sup>).

그리고 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아동의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대처하는 대기아동해소 선취(先取)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는데, 이를 더욱 보완하여 2013년 4월에 「대기아동해소 가속화 플랜」을 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3년과 2014년을 「긴급 집중대처기간」으로 하여, 2년간 20만 명분의 보육시설을 공급하고 그 후 3년간 잠재적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2013~2017년까지 총 40만 명분의 보육시설을 공급하여 대기아동을 감소시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2013, 2014년도의 「긴급 집중대처기간」에는 긴급 프로젝트로서 5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지원 패키지에 의거하여 의욕적인 지자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지원 패키지 5개의 축

- ① 임대방식 및 국유지를 활용한 보육소 정비
- ② 보육의 양적 확대를 대비한 보육사 확보
- ③ 소규모 보육사업 등 신제도의 선취
- ④ 인가를 받으려 준비하는 비인가 보육시설을 지원
- ⑤ 기업내 보육시설 지원

7) 새롭게 생긴 특정시구정촌이 14개, 특정시구정촌에서 제외된 것이 20개 임. 그리고 이는 아동복지법(소화 22년 법률 제 164호)에 근거 함.

이러한 연유로 2014년도 예산은 보육소 정원을 7.2만 명 증가시키기 위하여 보육소 운영비를 확보하였고, 2013년 추경예산 및 2014년도의 예산을 일체화시켜 도도부현에 설치하고 있는 안심 어린이 기금에 소요 금액을 더하여 사업 기한을 1년 연장하게 되었다. 또한, 보육소, 소규모 보육, 인정 어린이원 등의 정비 및 보육사 확보 대책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그리고 2015년도에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이하, 신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보육 긴급확보사업인 「대기아동해소 가속화 플랜」 뿐만 아니라 신제도하에서 시정촌이 실시하는 지역 어린이·육아지원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보육, 가정 보육, 유치원의 장시간 보육 및 인가를 받으려 준비하는 비인가 보육소 지원, 보육사 처우개선, 이용자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기아동해소를 위한 대처를 더욱 강력히 지원함과 동시에 방과후 아동클럽의 보완, 지역 육아지원 거점사업, 일시보육사업,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유아가정 방문사업 등에 관한 보조를 한다.

### 5)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

기본방침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책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 방침으로 주로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개선 및 예산 편성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 구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이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추진

- ① 인구급감·초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50년 후에 1억명 정도의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② 경제를 글로벌화 시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고, 고부가가치의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
- ③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의욕, 개성 및 능력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제도 및 구조 구축
- ④ 개성을 살린 지역전략과 지역의 「집약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생활 및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
- ⑤ 기반이 되는 제도, 문화, 공공 정신 등 사회를 지지해주는 토대를 중시

#### ○ 소자화 대책

- ① 인구급감·초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소자화 위기라고 할 수 있는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함
- ② 출산·육아도 사회보장의 한 축이라는 의식을 공유하여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며, 결혼·임신·출산·육아의 「끊임없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아이들에 대한 자원배분을 확충
- ③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의 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가정 및 지역의 협력을 얻어, 셋째 자녀 이후의 출산·육아·교육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검토
- ④ 새로운 소자화 대책의 개요를 2014년도

내에 책정하고, 자녀·육아 지원제도를 2015년 4월에 시행

⑤ 자녀·육아 지원제도에 기초를 둔 유아 교육·보육·육아지원의 양적확충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추진하여, 소비세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적절한 재원 검토

⑥ 도시와 지방 각각의 특성에 맞는 소자화 대책을 국가와 지자체,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서로 연계하여 추진

⑦ 국민, 기업, 학교, 미디어 등의 이해 관계자가 소자화 위기 돌파 의식을 공유하고, 동시에 아동학대방지대책도 추진

위의 소자화 대책은 앞에서 살펴본 긴급 대책 및 긴급 제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기본 방침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과거의 저출산 정책과는 다르게 정책 자체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개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본 내의 평가를 살펴보면, 이전보다일보 전진했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재정과 인구라는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대처하려는 자세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반면, 부처간 칸막이 행정 및 관계 단체의 반대로 충분한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체적 방안을 주저하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sup>8)</sup>, 그리고 일본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미 200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14년이 되어서야 인구 유지를 위한 정부

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 자체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며, 저출산 정책도 셋째아부터의 출산·육아·교육에 중점적인 지원을 하는 것 이외의 구체적 방안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는 것을 들 수 있다<sup>9)</sup>. 따라서 앞으로 기본방침이 적절하게 보완되고 시행되어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나가며

본고는 최근 일본 정계와 학계에 불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지어서 일본의 저출산에 관한 정책을 과거부터 살펴왔다. 일본의 저출산 정책의 시작은 1989년의 「1.57 쇼크」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고, 그 후 엘젤플랜, 신엔젤플랜, 그리고 최근의 어린이·육아비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저출산 정책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약 20년에 걸친 저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회복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①그동안 일본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약했던 점, ②국민들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의 저출산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였던 점, ③저출산 정책 안에 저출산 정책과는 관계 없는 각 부처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8) 読売新聞(2014). 「骨太の方針 成長と改革の両立が肝心だ」 6月25日(요미우리 신문(2014). 골태방침 성장과 개혁의 양립이 중요하다, 6월 25일)

9) 山陽新聞(2014). 「人口1億人維持 一極集中対策が足りない」 6月30日(산요 신문(2014). 인구 1억유지 일극집중대책이 부족하다, 6월 30일).



집중적인 정책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다<sup>10)</sup>.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과거의 저출산 정책에서 주로 역점을 두었던 것은 자녀의 양육이었다. 즉, 결혼한 커플(부부)의 육아를 보조하는 정책으로 보육소의 확충 및 일과 가사의 양립 정책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러한 정책들을 우선했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sup>11)</sup>.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소자화 위기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저출산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당초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되어왔던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이 정부 주도의 저출산 정책 중 하나의 큰 축이 되었고, 이러한 관점의 정책이 2014년 6월 24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기본방침에 포함되었다. 또한, 기본방침은 일본 정부 문서로는 처음으로 인구 1억명 유지라는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

인 정책 실행이 기대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일본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는 현재까지 행해 왔던 미혼 인구, 즉 이미 결혼하여 출산한 자녀들이 있는 인구에 대한 정책 뿐만 아니라 결혼·임신·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정책, 다시 말하면 미혼 인구와 신혼 세대에 대한 정책도 중시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새로마지 플랜에서부터 미혼 인구 및 신혼 세대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중에서도 미혼 인구에 대한 정책은 초기 시행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이런 상황에 비추어 새롭게 미혼 인구와 신혼 세대를 정책 대상에 포함시킨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 될 것인가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

10) 増田雅暢(2009). 「なぜ少子化対策が効果を発揮しないのか—ニーズに即した総合的な製作の展開を—」 『クォーターリー生活福祉研究』, 通巻70号 Vol.18, No.2(마스다 마사노부(2009). 왜 소자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있는 걸까 -니즈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의 전개를-, 쿼터리 생활복지연구, 70(2)).

11) 물론 지원정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약 20년 동안 일관적으로 양육을 보조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정책 방향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됨. 또한 본 고는 일본의 저출산 정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